



주요국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 비교

- 한국 vs. G5 비교 -

SUMMARY

I. 현황

- ❖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년 20.3%(초고령사회 진입), '45년 37.0%(세계 1위 일본 추월) 전망
- ❖ 한국 노인(66세 이상) 10명 중 4명(40.4%)은 빈곤한 상태로, G5평균(14.4%)의 약 3배
- ❖ 한국의 노후소득원 중 공·사적연금 소득 비중은 48.0%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vs. G5평균 76.9%)

II. 연금 제도 비교

공적연금	연금수급개시연령	62세	66세	65세	65세	66세	67세
	보험료율 주1)	9.0%	10.6%	18.3%	18.6%	25.8%	27.8%
사적연금 주2)	가입률 주3)	17.0%	67.9%	56.5%	66.0%	54.0%	32.6%
	세제지원율 주4)	19.7%	40.9%	31.0%	21.3%	23.7%	28.2%

III. 연금 개혁 사례

-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 ❖ (G5)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공적연금 재정 고려하여 연금액 자동조정장치 마련, 조기퇴직연금액 삭감, 급여연동기준 변경(ex. 임금상승률 → 물가상승률)
- 사적연금 활성화
 - ❖ (G5)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 또는 소득공제 및 세제지원 사적연금 도입
 -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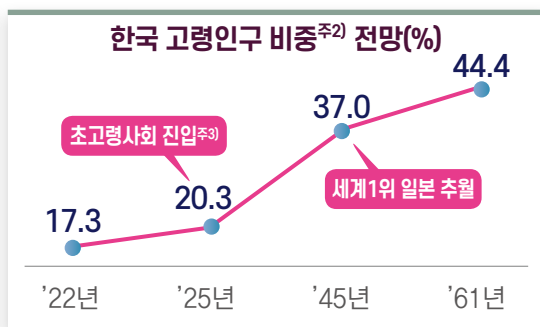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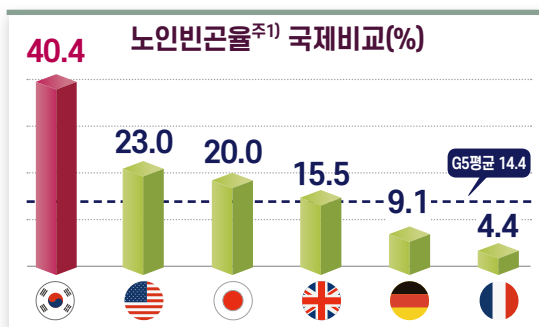
※ 주 1)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의 합, 2) 정부기관 외 기관이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 15~64세 인구(獨: 2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한 자의 비율, 4) 납입금 중 세액감면·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 비율

I. 고령화 실태

韓 노인빈곤율,
G5평균(14.4%)의
2.8배(40.4%)

韓 고령화율,
23년 뒤 세계 1위
일본 추월

● 韓의 노인 빈곤문제는 이미 심각한데, 고령화 추세가 급격하여 앞으로 더 심화될 우려



※ 주 1) 66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의 비율, '19년 기준(단, 韓 20년, 日·獨은 '18년 기준), 2)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3)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1년)」, OECD.stat

韓 노후소득원 중
공적이전소득 비중,
G5평균(56.1%)의
절반(25.9%) 불과

● 韓은 노후소득원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에 비해 낮고, 사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편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 가처분소득 대비, '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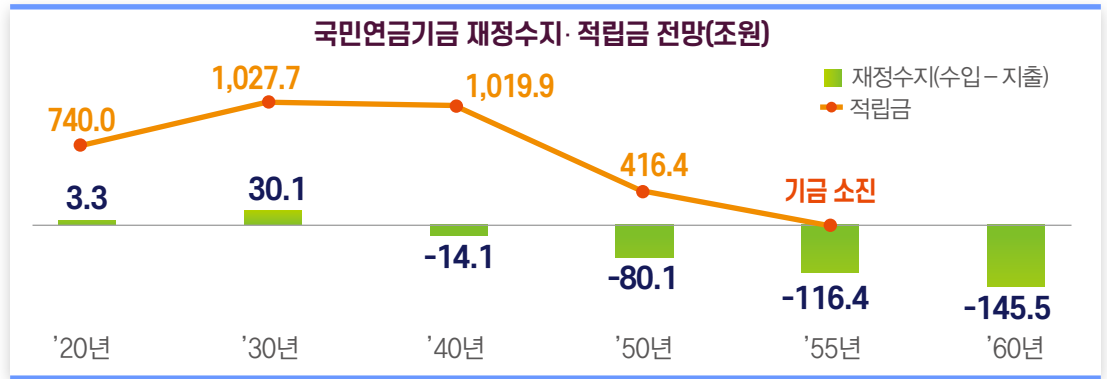
공적이전소득 주1)	25.9	41.3	50.1	68.3	42.8	78.2
사적이전소득 등 기타 주2)	22.1	23.5	9.6	13.7	41.8	15.4
근로소득 주3)	52.0	35.3	40.3	17.9	15.3	6.4

※ 주 1)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2)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 외 저축에 대한 수익 등 자본소득, 퇴직금, 사망일시금 등, 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21년)」

국민연금 기금
'55년 고갈 전망

●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39년 적자 전환, 적립금은 '55년 소진될 전망으로 재정안정화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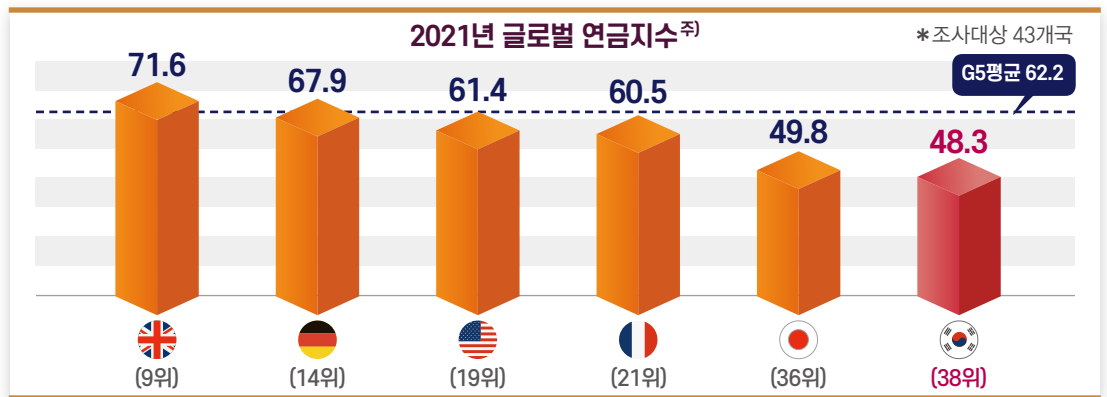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20.7월)」

II. 연금제도 비교

韓, 연금경쟁력
조사대상 43개국 중
38위로 최하위권

● 韓의 글로벌 연금지수(100점 만점)는 48.3(38위)으로, G5평균(62.2)보다 저조한 수준
- 韓은 낮은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40위), 사적연금 경쟁력 부족(39위)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영향



※ 주: ▶연금액의 적정성(연금급여액, 정부지원 수준 등 세부지표 고려),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연금 가입률, 인구구조, 연금자산, 정부부채, 공적지출 등), ▶사적연금제도의 완결성(사적연금 규제, 지원, 운영비용 등) 3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

*자료: Mercer · CFA Institute「2021 Global Pension Index」

韓 공적연금
개시연령, 62세
〈 G5 65~67세,

● G5는 韓보다 높은 연금개시연령과 보험료율 및 장기의 완전연금 가입기간으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반면, 韓은 낮은 연금개시연령과 보험료율 등으로 공적연금 재정안정성 취약

공적연금 제도 국제비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연금수급 개시연령	현행	62세	66세	65세	65세	66세	67세
	상향 예정	65세 * '33년부터	67세 * '27년부터	75세 * 희망시 '22년부터	67세 * '29년부터	68세 * '46년부터	-
보험료율 ^{주1)}		9.0%	10.6%	18.3%	18.6%	25.8%	27.8%
완전연금 ^{주2)} 가입기간		20년	10년	25년	45년	35년	43년

※ 주 1) '20년 기준, 2)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 각국 관계법령에서 필요 가입기간 규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19년), OECD「Pensions at a Glance」('21년), 한국노동연구원('19년) 등

韓 사적연금 가입률,
17.0% 〈 G5평균 55.4%

● 韓은 G5와 달리 낮은 세제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해 가입률도 낮은 실정

사적연금 제도 국제비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가입률(15~64세 인구 비) ^{주1)}		17.0%	67.9%	56.5%	66.0%	54.0%	32.6%
세제지원율(납입금 비) ^{주2)}		19.7%	40.9%	31.0%	21.3%	23.7%	28.2%

※ 주 1) 英·日是 '20년, 韓·美·獨·佛은 '19년 기준, 2) '18년 기준

*자료: OECD「Pensions at a Glance」('21년), 「Pensions Outlook」('18년)」

韓 세제지원율,
19.7% 〈 G5평균 29.0%

III. 연금개혁 사례

해외사례 참고하여
韓 연금개혁 적극
나설 필요

-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G5국가들은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가입자 수·인구구조 등에 따른 연금액 자동조정 장치 도입, 급여연동기준 변경으로 연금액 상승폭 완화 등 공적연금 재정건전성 제고
- **(사적연금 활성화)** G5국가들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 지원확대 및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적연금 참여율 제고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G5) 연금개시연령
상향
▶(日·獨) 연금액
자동조정 장치 도입
▶(英·佛) 급여연동기준
변경 → 상승폭 완화

사적연금 활성화
▶(G5) 취약계층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
지원 확대
▶(美·獨·英)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 도입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사적연금 활성화
	❖조기퇴직연금(62세 개시) 급여액 삭감 (완전연금의 80% → 70%)('83년) ❖연금개시연령 상향(現 66세 → '27년 67세)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 추가적 세액공제 지원제도 도입('02년) ❖저소득층 세액공제 지원 퇴직연금 도입('02년)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09년)
	❖기대수명, 가입자 수에 따라 연금급여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04년) ❖연금개시연령 상향(現 65세 → 희망시 '22년 최대 75세)	❖퇴직연금 가입범위에 전업주부 포함('17년) ❖중소·영세기업 보조금 지원 및 수수료 부담 낮춘 퇴직연금 도입('20년)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 생산가능인구 등에 따라 연금급여액을 자동조정하는 장치 도입('04년) ❖연금개시연령 상향(現 65세 → '29년 67세)	❖저소득·다자녀가구 보조금 지원 및 소득공제 혜택 개인연금(리스터연금) 도입('01년) ❖자영업자 세제지원 개인연금(뤼롭연금) 도입('05년)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13년)
	❖급여연동기준 변경(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中 높은쪽 → 물가상승률)('80년) ❖급여산정기준 변경(임금이 가장 높은 20년간 평균 → 쉐기간 평균임금)('86년) ❖연금개시연령 상향(現 66세 → '28년 67세 → '46년 68세)	❖중간소득층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 지원 퇴직연금(스테이크홀더 연금)도입('01년)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12년) ❖저소득층·소기업 보조금 지원 및 수수료부담 낮춘 퇴직연금(NEST)도입('12년)
	❖급여연동기준 변경(임금상승률 → 물가 상승률)('93년) ❖급여산정기준 변경(임금이 가장 높은 10년간 평균 → 임금이 가장 높은 25년간 평균)('93년) ❖연금개시연령 상향(65세 → 67세)('10년) ❖완전연금 가입기간 확대(40년 → 43년)('13년)	❖자영업자 특화 세액공제 지원 개인연금 (Madelin Contracts) 도입('94년) ❖저소득층 소득공제 혜택 개인연금(PERP) 도입('03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19.8월)」, 국민연금공단 「해외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 및 시사점 연구('19.3월)」, 보험연구원 「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시사점('20.1월)」 등을 재정리

쟁점과 체크포인트

- ✓ 노인부양비 부담 급증, 국민연금 기금 고갈 전망으로 국민연금 개혁 시급
- ✓ 노후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 절실
-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액절감을 통해 저축 인센티브 확대 필요(OECD Pensions Outlook, '18년)

■ 내용문의: 고용정책팀 김용춘 팀장 (02-3771-0480) 김혜진 연구원(0424) khj@keri.org



글로벌 싱크탱크 FOCUS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경제의 디지털화로부터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다루는 Two-Pillar 합의안

2021.10.



<https://www.oecd.org/tax/beps/brochure-two-pillar-solution-to-address-the-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october-2021.pdf>

SUMMARY

'21년 10월, OECD와 G20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따른 세원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6개국이 참여한 Two-Pillar 합의안*(일명 '디지털세')을 도출

- *〈Pillar 1〉 매출발생국에 영업이익률 10%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과세권 부여 등
-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해외진출 초기기업 5년간 적용유예 등

이는 글로벌 IT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전세계에 판매하면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

-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비용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1,000~2,400억 달러로 추산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매년 1,500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세수가 추가 확보되는 등 세원잠식 문제가 개선될 수도 있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등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세금 분쟁, 행정비용 증가 등 전세계 GDP의 1% 이상 손실이 발생할 우려



CSIS

Five Things to Watch in 2022

2022년에 눈여겨보아야 할 5가지 사실

Matthew P. Goodman 외 3인
2021.12.

SUMMARY

① COVID-19 경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세계적으로 긴축통화정책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었고, 팬데믹 지속시 향후 5년간 세계 GDP 5.3조달러의 손실 전망(IMF)

②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구상안(IPEF)*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한 국익 향상 및 회의적인 아시아 동맹국들의 포섭 가능 여부가 관건

- *무역 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및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공동의 원칙과 기준 설정

③ 미-중 경쟁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외 투자심사 강화, 수출 통제, '국산 구매(Buy American)' 요청으로 리쇼어링을 장려하는 등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

④ 디지털 화폐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사설 암호화폐의 채택이 늘어날 전망

-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외국인 방문객의 디지털 위안(e-CNY) 사용을 권장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과 협력하여 디지털달러 연구 성과를 곧 발표할 계획

⑤ 저궤도 위성 통신시장

LTE나 5G 통신 등 지상기지국에 비해 월등한 효용범위를 가지고, 통신지연율이 현저히 낮은 저궤도 위성(LEO) 통신시장 선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 *미국의 스페이스X는 '27년까지 1.2만기, 영국의 원웹은 '26년까지 2,000기, 캐나다의 텔레셋은 '27년까지 117기를 발사할 계획



<https://www.csis.org/analysis/five-things-watch-2022>